

코로나 1차연도(2020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 06.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경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1. 들어가며	6
2. 코로나 1차연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1) 가구소득 관련 변화	8
2) 가구 재무상태(자산 & 부채) 변화	21
3. 나가며	27

요약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본격화 하자,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2020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감소 폭은 -3.1%에 달했고, 우리나라 또한 -0.9%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실물경제 위축에 맞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집행하였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다.

경제주체로서 가구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들이 다양한 경로로 가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코로나 1차연도인 2020년 가구소득과 재무상태가 2019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계금융복지조사(특히 2021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다.

□ 코로나 1차연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국내외적 경제 충격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은 평균 201만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3.39%(5,924→6,125만원) 증가했다. 소비지출증가율은 불과 1.24%(34만원↑)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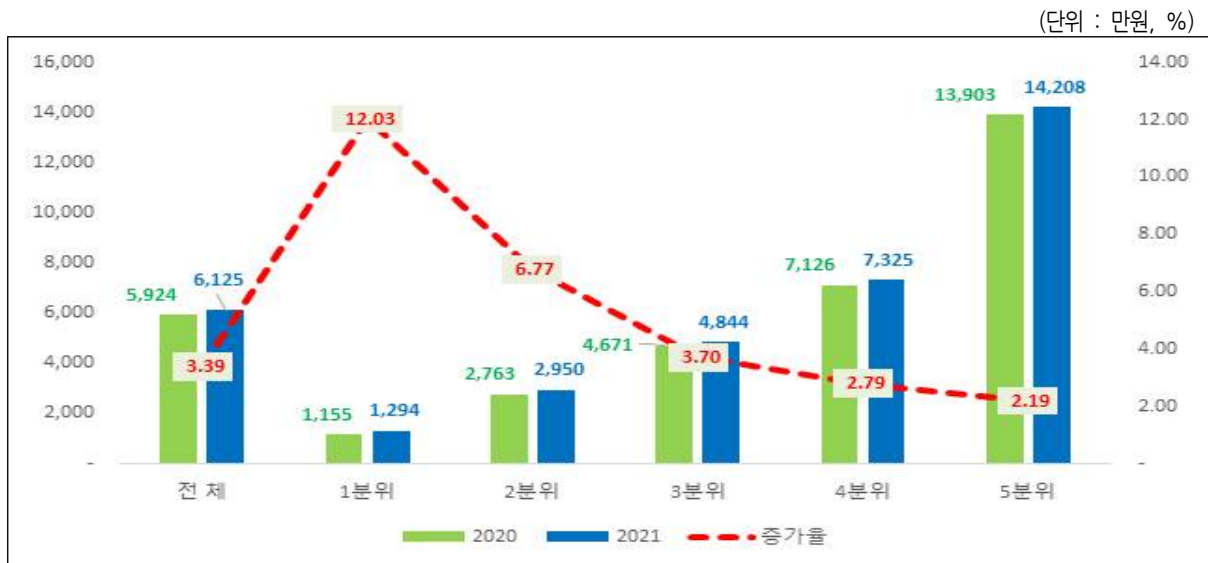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145만원(31.69%) 늘어났다. 노동소득(64만원, 1.68%)과 재산소득(15만원, 3.62%)도 소폭 늘어났고, 사업소득(-16만원, -1.39%)과 사적 이전소득(-7만원, -6.37%)은 감소했다.

2020년 공적 이전소득이 31.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20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집행됐고, 지자체의 경우 시기나 방식 등을 특정할 수 없으나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 2020년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31.69%)과 순증액(145만원)은 통계치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최고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가구들에 더 큰 영향을 미쳐, 한시적이거나 가구 집단 간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잘 보여준다. 2020년 소득 5분위별 소득증가율은 1분위(12.03%), 2분위(6.77%), 3분위(3.70%), 4분위(2.79%), 5분위(2.19%) 등으로 소득 상위 분위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은 더 낮아졌다.

[그림] 코로나 1차연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더불어 공적 이전소득 증가는 자산 보유량이 적은 가구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자산 5분위 및 순자산 5분위별 2020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자산 보유량이 적은 1·2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자산 보유량이 많은 4·5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은 1분위(6.11%)와 2분위(6.52%) 등 저자산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4분위(0.78%)와 5분위(2.24%) 등 고자산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또한 저자산 가구 집단인 1분위(4.06%)와 2분위(5.96%)의 소득증가율이 4분위(1.55%)와 5분위(3.20%)보다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로 미친 영향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 가구·60대 이상 가구·초

졸 이하 가구·기타 및 임시일용직 가구 등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소득증가율은 3.39%로, 여성(8.52%), 60대 이상(7.77%), 초졸 이하(6.85%), 중졸(4.11%), 기타(5.85%), 임시일용직(3.77%) 가구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가구 평균을 넘어섰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는 한시적으로나마 가구 집단 간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종사상지위별 가구 집단 중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증가율(1.05%)과 순증액(68만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가구주 본업인 사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가구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보면, 사업소득은 2019년 4,173만원에서 2020년 4,060만원으로 113만원이 줄면서 -2.71%의 역성장을 보였다. 노동소득(-2.05%, -28만원↓)과 재산소득(-3.49%, -18만원↓)도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58.0%(395→624만원, 229만원↑) 대폭 늘어나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그림] 코로나 1차연도 소득·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액 변화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코로나 시기(2020년) 가구 소비지출 변화의 가장 큰 특징 또한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소비지출증가율이 고소득·고자산 가구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

먼저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소득 1분위 6.76%(1050→1121만원, 71만원↑), 2분위 5.10%(1825→1918만원, 93만원↑)로 소득 4분위 0.41%(3384→3398만원, 14만원↑)와 5분위 가구 -1.13%(4798→4744만원, -54↓)보다 높았다.

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도 1분위 2.77%(1625→1670만원, 45만원↑), 2분위 2.46%(2112→2164만원, 52만원↑) 등으로 5분위 0.56%(4091→4114만원, 23만원↑)와 4분위 0.03%(3183→3184만원, 1만원↑)보다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 소비지출 변화에서 나타난 결과 또한 저소득·저자산 가구 집단에서 더 활발하게 소비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전체 가구 소비지출증가율은 1.24%(34만원↑)에 머물렀지만, 여성(4.81%, 79만원↑), 60대 이상(5.06%, 93만원↑), 20대(2.84%, 55만원↑), 초졸 이하(5.72%, 70만원↑), 중졸(2.18%, 40만원↑), 기타(3.59% 58만원↑), 임시일용직(2.41%, 47만원↑) 가구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소비지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0년 가구 저축가능액은 7.22%(151만원↑)나 늘었지만,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20년 12월 10억 4299만원에서 2021년 12월 12억 4978만원으로 19.8% 상승한 결과, 가구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모으는 시간은 2020년 50.0년에서 2021년 55.9년으로 1년간 5.9년이 늘어났다.

2021년 3월 기준 전체 가구 자산은 50,25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82%(5,710만원) 늘어났다. 동일기간 부채증가율은 6.61%(8,256→8,801만원, 545만원)였고, 순자산은 14.23%(36,287→41,452만원, 5,165만원↑)가 늘었다. 순자산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물자산(부동산) 증가율이 14.38%(34,039→38,934만원, 4,895만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실제로 금융자산증가율도 7.76%(10,504→11,319만원, 815만원↑)로 적지 않은 상승 폭을 보였지만, 실물자산증가율은 14.38%(34,039→38,934만원, 4,895만원↑)로 더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실물자산 큰 폭 증가로 순자산증가율(14.23%, 36,287→41,452만원)과 순증액(5,165만원)도 크게 늘었다. 2020년 한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충격이 매우 심했지만, 실물자산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구 순자산이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시계열을 확장하여 2012년 이후 2021년까지의 가구 재무상태 변화 추이를 살펴봐도, 9년간 금융자산증가율은 39.04%(8,141→11,319만원, 3,178만원↑)에 머물렀지만, 실물자산 증가율은 60.99%(24,184→38,934만원, 14,75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 시기 가구 부채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9년간 부채증가율을 보면 61.49%(5,450→8,801만원, 3,351만원↑)에 달하는 등 자산증가율(55.47%)보다 높았다. 동일기간 순자산증가율도 54.24%(26,875→41,452만

원, 14,577만원)에 달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 증가는 부채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보유 실물자산(부동산) 가치를 늘려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자산 격차 확대 추세는 여전했다.

2021년 3월 기준 자산 5분위별 전년동월대비 자산 순증액을 보면, 전체 가구 평균 순증액은 5,710만원(44,543→50,253만원)이었으며, 5분위 가구는 단 1년 만에 1억 6,954만원(134,734→151,688만원)이 늘어났다. 4분위 가구 순증액도 7,151만원에 달했지만, 1분위 가구 순증액은 288만원(2,309→2,597만원)으로 5분위 가구 순증액의 1.7%에 불과했다.

순자산 순증액 또한 자산 순증액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는데, 5분위(16,061만원), 4분위(6,030만원), 3분위(2,458만원), 2분위(946만원), 1분위(309만원) 가구의 순이었으며, 전체 가구 평균 순증액은 5,165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1차연도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는 저소득·저자산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을 높여 일시적으로나마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자산 격차를 줄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보유자산이 많은 고소득·고자산 가구 집단의 자산(순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1차연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제적 충격 발생 시 가구(원)를 대상으로 직접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또한 소득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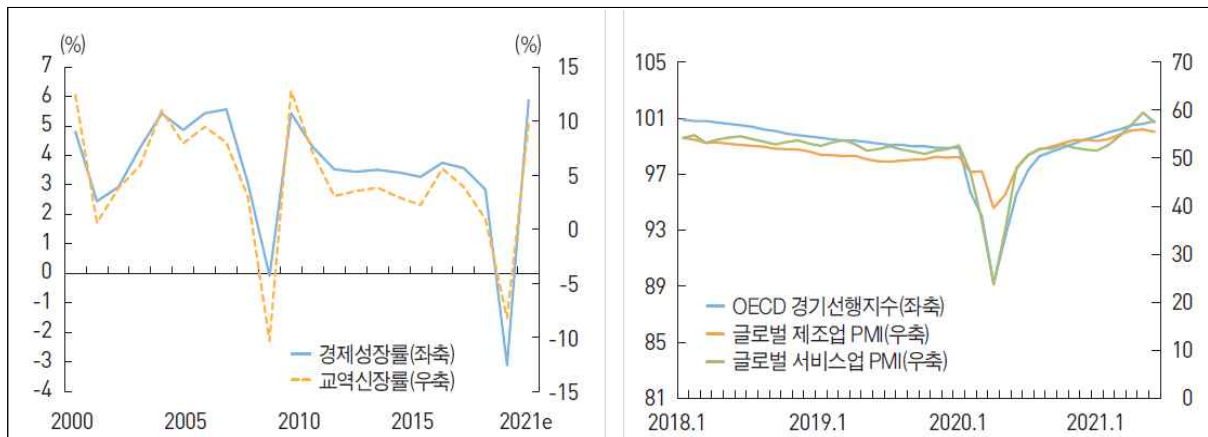
셋째, 내수 활성화, 즉 소비 진작에 있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넷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다.

1. 들어가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¹⁾에 대하여 팬데믹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교역²⁾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소비 또한 크게 위축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코로나에 대한 감염·방역 조치뿐 아니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실행해야만 했다.

[그림1]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신장률 / 경기선행지수 및 글로벌 PMI



자료) IMF, OECD, Bloomberg, 한국은행

코로나 사태 초기 아시아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비관적 경제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년 2월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³⁾는 물론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⁴⁾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한 미국의 경우 2020년 3월 셋째 주(3.15~21일) 실업수당을 신청 사례가 334만건으로 종전 최고치인 2차 오일쇼크(1982년 10월) 당시의 69.5만 건을

1)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2020년 들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에는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시켰으며, 마침내 3월 11일 경보단계 중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2) 1980년 이후 세계교역이 감소한 사례는 1982년(-1.6%)과 2009년(-10.4%)에 이어 2020년이 세 번째로 감소폭은 -8.5%로 추정되고 있다.

3) OECD 경기선행지수는 발표 시점부터 3~6개월 정도의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경기 팽창을, 100 이하이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는 표본업체 구매 관리자의 설문을 통해 산출되는 수치로 50을 이상일 경우 해당 부문 경기 호황을, 50 미만일 경우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대폭 뛰어넘었고, 3월 넷째 주(3.22~28일)에는 66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 1차연도인 2020년 세계경제 감소 폭은 -3.1% 내외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 당시(-0.1%)보다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 이후 종전까지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2009년이 유일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이 타격을 받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0.9%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실물경제 위축에 맞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재정 정책적 대응책을 집행하였다. 중앙은행들도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위축에 맞서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다. 미 연준의 경우 두 차례 긴급조치를 통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고, 국채 및 MBS 매입 및 긴급대출제도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집행되었다. 한국은행도 2020년 3월(1.25→0.75%, 50bp↓)과 5월(0.75→0.50%, 25bp↓)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⁵⁾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주체로서의 가구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나,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들이 다양한 경로로 가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⁶⁾는 코로나 1차연도인 2020년 가구소득과 재무상태가 2019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계 금융복지조사⁷⁾’ 자료(특히 2021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5)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의 하나로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인을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이전에는 총액한도대출이라 불렀는데 2014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6) 본 보고서의 그림과 표에 사용된 모든 연도는 기본적으로 조사연도를 의미한다. 자산 및 부채 관련 항목들은 각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자료이며, 소득 및 지출 관련 항목들은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기준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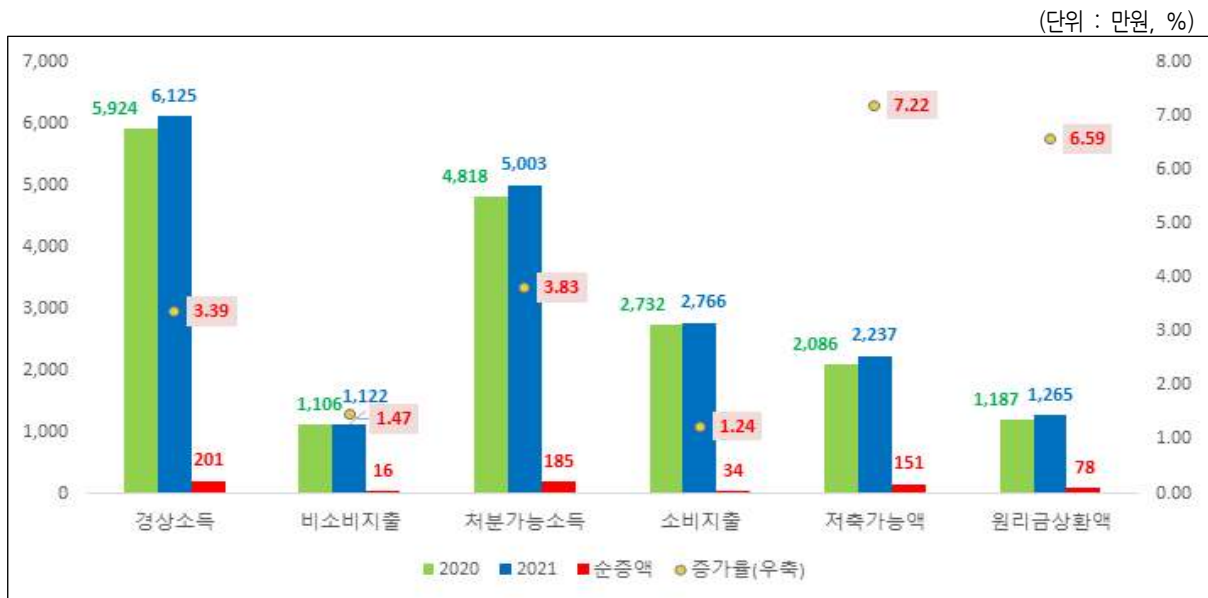
7) 통계청과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단위는 경제적 가족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단위와는 분석단위가 다르다.

2. 코로나 1차연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⁸⁾

1) 가구소득 관련 변화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 경제는 -3.1%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또한 -0.9%의 역성장을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은 가구 평균 201만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3.39%(5,924→6,125만원) 증가했다. 비소비지출(1.47%)과 소비지출(1.24%)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아지면서, 가구 저축가능액은 7.22%(2,086→2,237만원, 151만원↑) 증가했다. 원리금상환액이 2019년 대비 6.59%(1,187→1,265만원, 78만원↑)로 크게 늘면서, 소비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코로나 1차연도 가구소득·지출·저축가능액 및 원리금상환액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1)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주2) 저축가능액은 경상소득에서 지출액(비소비지출+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값임.

시계열을 늘려 2012년 이후 2021년까지의 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추이 또한 2021년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이후 9년간 가구소득은 44.7%(1,892만

8)본 보고서에서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관련 수치는 모두 전체 가구 평균값이다. 중앙값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중앙값임을 표기하였다.

원↑) 증가했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20.2%(464만원↑)에 불과했다. 소득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압도하면서, 2021년 가구평균 저축가능액은 2,237만원으로, 2012년 조사 당시(1,174만원)와 비교하면 1,063만원이나 늘어났다. 소득증가율에 비교할 때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억제된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원리금상환 부담이 9년 동안 112.3%(596→1,265만원, 669만원↑)나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표1] 가구소득 · 지출 · 저축가능액 및 원리금상환액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경상소득 (a)	비소비지출 (b)	처분가능소득 (c=a-b)	소비지출 (d)	저축가능액 (e=c-d)	원리금상환액
2012	4,233	757	3,476	2,302	1,174	596
2013	4,479	828	3,651	2,303	1,348	697
2014	4,658	839	3,819	2,306	1,513	830
2015	4,770	843	3,927	2,327	1,600	941
2016	4,882	861	4,021	2,340	1,681	1,068
2017	5,478	958	4,520	2,473	2,047	1,024
2018	5,705	1,034	4,671	2,601	2,070	1,102
2019	5,828	1,098	4,729	2,692	2,037	1,175
2020	5,924	1,106	4,818	2,732	2,086	1,187
2021	6,125	1,122	5,003	2,766	2,237	1,265
순증액	1,892	365	1,527	464	1,063	669
증가율	44.7	48.2	43.9	20.2	90.5	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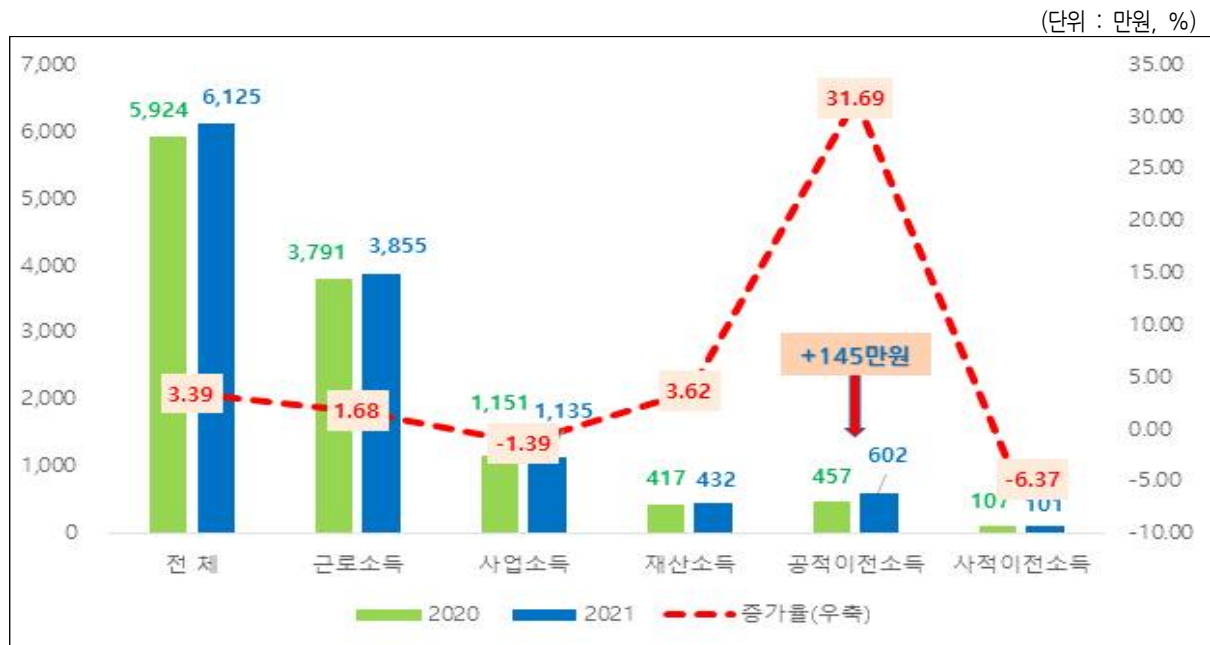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2012~2021)

- 주1)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 주2) 저축가능액은 경상소득에서 지출액(비소비지출+소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값임.
- 주3) 순증액과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21년 수치를 비교한 값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구소득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공적 이전소득이 2019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2020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31.69%나 증가, 가구당 평균 145만원이 늘어났다. 재산소득은 3.62%(15만원) 증가했고, 노동소득 증가율은 1.68%(64만원)에 머물렀다.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사업소득은 -1.39%(-16만원)로 역성장을 보였다. 사적 이전소득도 -6.37%(-7만원) 줄어들었다.

2020년도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 31.69%와 순증액 145만원은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통계치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그림3] 코로나 1차연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표2] 공적 이전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득액	180	187	211	240	275	328	351	387	457	602
순증액	-	7	24	29	35	53	23	36	70	145
증가율	-	3.89	12.83	13.74	14.58	19.27	7.01	10.26	18.18	31.69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2012~2021)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2020년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31.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 분석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정책 또한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우리나라는 경기 대응의 일환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다. 그런데 재정 정책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 그리고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하여 이견이 많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가구소득을 통해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재난지원금이 가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3] 2020년 집행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구 분		지원범위	지원수준	지급(신청) 시기
중앙정부	제1차	전 국민(2,171만가구)	가구원 수별 차등 (40~100만원)	2020.05
	제2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부담 가구 특수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생계 위기 가구 법인 택시기사 만16~34세, 65세 이상	1인당 50~200만원 자녀 1인당 15~20만원 1인당 50~100만원 1인당 50만원 가구당 40~100만원 1인당 100만원 1인당 2만원(통신비)	2020.09
지자체 (일부 사례 예시)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난 긴급 생활비)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	3.30 ~ 5.15
	경기도	모든 도민(재난 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18개 시, 군의 경우 5~20 만원 합산 지급	4.09 ~ 4.3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주) 경기도 18개 시, 군(과천 10, 광명 5, 김포 5, 동두천 15, 부천 5, 성남 10, 시흥 10, 안성 25, 양주 10, 양평 12, 여주 10, 용인 10, 의왕 5, 의정부 5, 이천 15, 평택 10, 하남 5, 화성 2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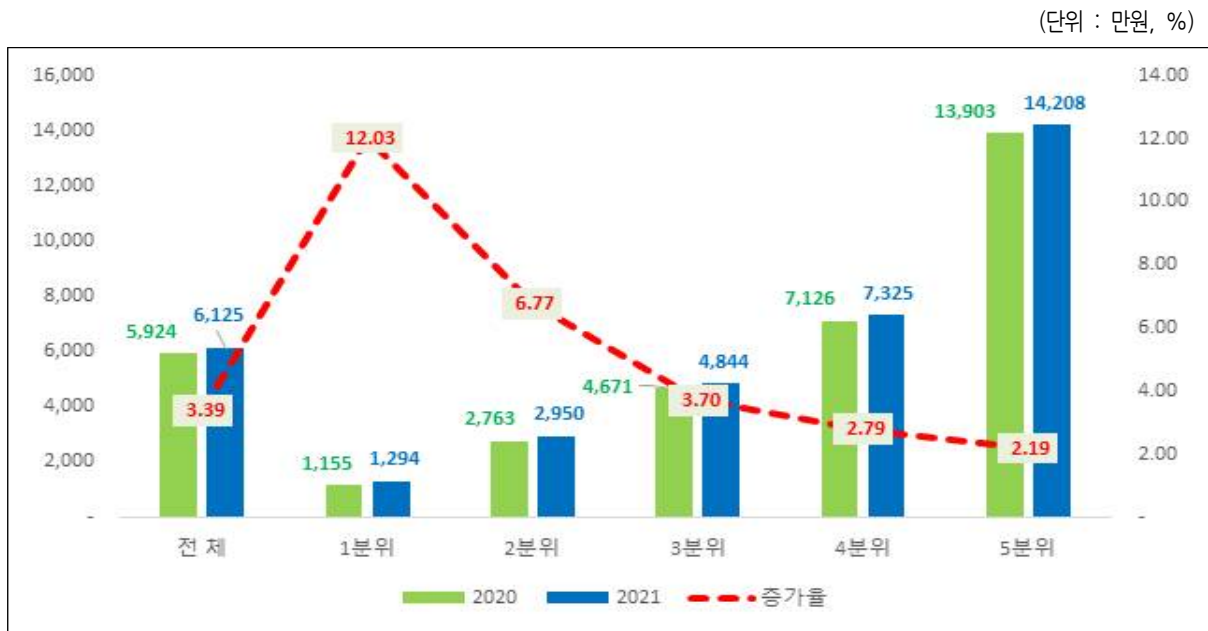
위 [표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2020년 집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거주지 및 가구원 수, 연령대 및 직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가구별이나 가구주 특성별로 일목요연하게 그 규모를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20년 각 가구 집단의 명목소득에 근거하여 소득증가율과 순증액 등의 변화만을 분석할 것이다.

코로나 1차연도 우리나라 가구소득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재원지원금으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가 소득과 보유 자산이 적은 저소득·저자산 가구 집단에 상

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가구 집단 간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먼저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소득이 적은 하위 분위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소득증가율은 1분위 가구가 12.03%(1155→1294만원, 139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 6.77%(2763→2950만원, 188만원↑), 3분위 3.70%(4671→4844만원, 174만원↑), 4분위 2.79%(7126→7325만원, 199만원↑), 5분위 2.19%(13903→14208만원, 184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림4] 코로나 1차연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한편 2020년 자산 5분위 및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공적 이전소득 증가가 저자산 가구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1분위(6.11%)와 2분위(6.52%) 등 저자산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4분위(0.78%)와 5분위(2.24%) 등 고자산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또한 유사한 양상이었는데, 저자산 가구 집단인 1분위(4.06%)와 2분위(5.96%)의 소득증가율이 4분위(1.55%)와 5분위(3.20%)보다 높았다.

[그림5] 코로나 1차연도 자산·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변화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2020년 소득 구간별 가구소득 비율 변화 또한 재난지원금이 저소득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연소득 1천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2019년 7.8%에서 2020년 6.2%로 -1.6%p나 감소했다. 1~3천만원 가구 비중도 -0.3%p 하락했다. 그 외 구간은 모든 가구 비중이 증가했는데, 특히 가구소득 7천만~1억원 구간은 0.9%p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림6] 코로나 1차연도 가구소득 구간별 비율 변화

(단위 : %, %p)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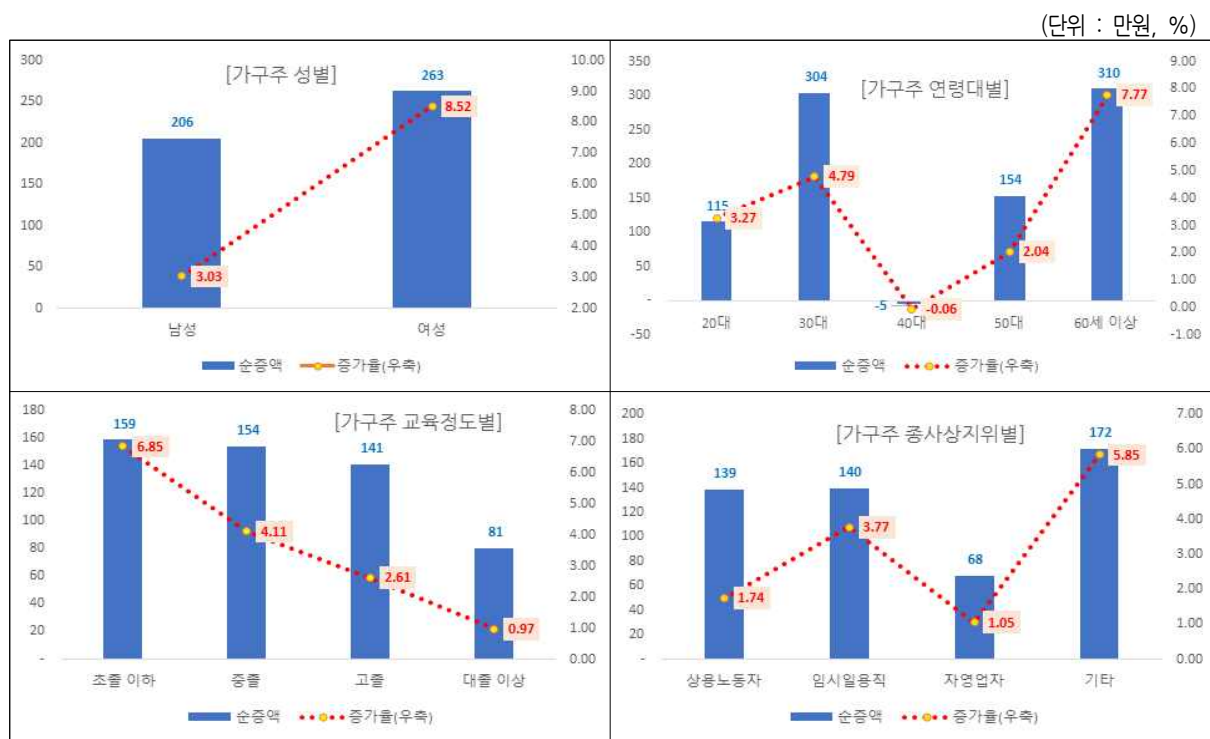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가구주 특성별 2020년 소득 변화를 통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여성·60대 이상·초졸 이하·기타 및 임시일용직 가구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성별 2020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저소득 가구인 여성 가구가 8.52%(3085→3348만원, 263만원↑)로 남성 가구 3.03%(6791→6997만원, 206만원↑)를 크게 앞섰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가율은 60세 이상 가구 7.77%(3989→4299만원, 310만원↑), 30대 가구 4.79%(6346→6650만원, 304만원↑), 20대 가구 3.27%(3533→3648, 115만원↑), 50대 가구 2.04%(7549→7703만원, 154만원↑), 40대 가구 -0.06%(7648→7643만원, -5만원↓)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인 60세 이상과 20대 가구소득 증가율이 고소득 가구인 40대와 50대 가구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7] 코로나 1차연도 가구주 특성별 소득 순증액 및 증가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순증액 및 증가율은 2019년 소득 대비 2020년 소득을 비교한 값임.

가구주 교육정도별로 보면 초졸 이하 가구가 6.85%((2322→2481만원, 159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졸 4.11%(3752→3907만원, 154만원↑), 고졸 2.61%(5401→5542만원, 141만원↑), 대졸 이상 가구 0.97%(8326→8407만원, 81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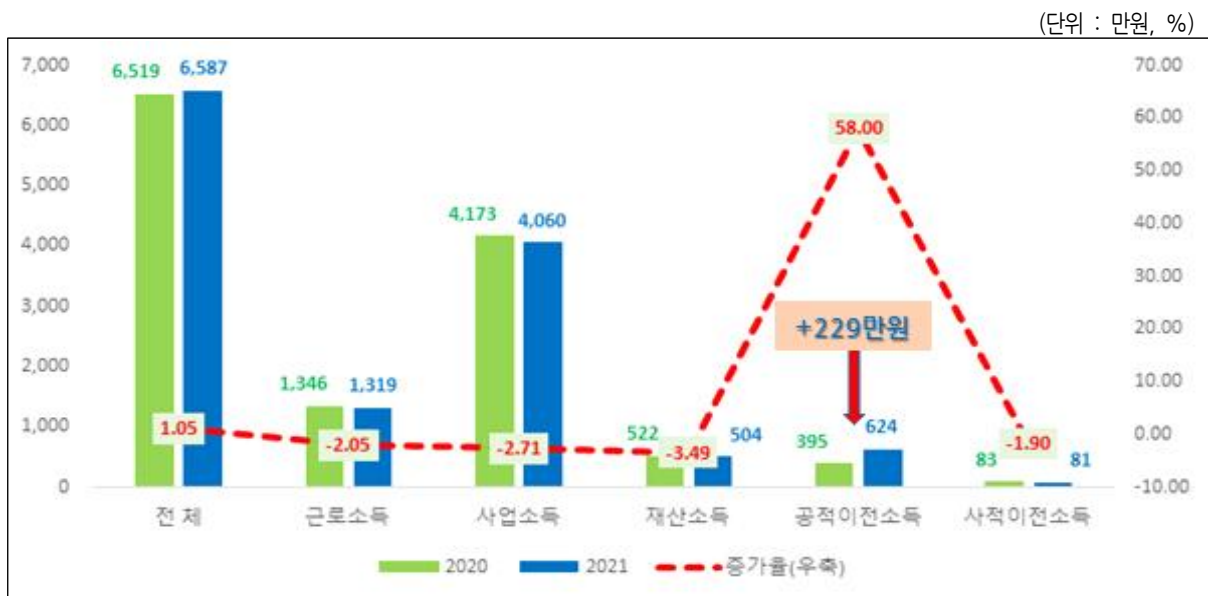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기타(무직 등) 가구 5.85%(2938→3110만원, 172만원↑), 임시일용직 가구 3.77%(3704→3844만원, 140만원↑), 상용노동자 1.74%(7958→8096만원, 139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가구는 1.05%(6519→6587만원, 68만원↑)로 소득증가율은 물론 순증액도 가장 낮게 나타나, 종사상 지위별 가구 집단 중 가장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자영업자인 가구의 소득증가율(1.05%)과 순증액(68만원)은 종사상지위별 가구 집단 중 가장 낮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2020년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가구주 본업인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자영업자 가구의 2020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본업인 사업소득은 2019년 4173만원에서 2020년 4060만원으로 113만원이 줄면서 -2.71%의 역성장을 보였다. 노동소득(-2.05%, -28만원↓)과 재산소득(-3.49%, -18만원↓) 또한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58.0%(395→624만원, 229만원↑)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가구는 본업인 사업소득에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적 이전소득이 229만원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가구 평균 1.05%의 소득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림8] 코로나 1차연도 자영업자 가구 소득원천별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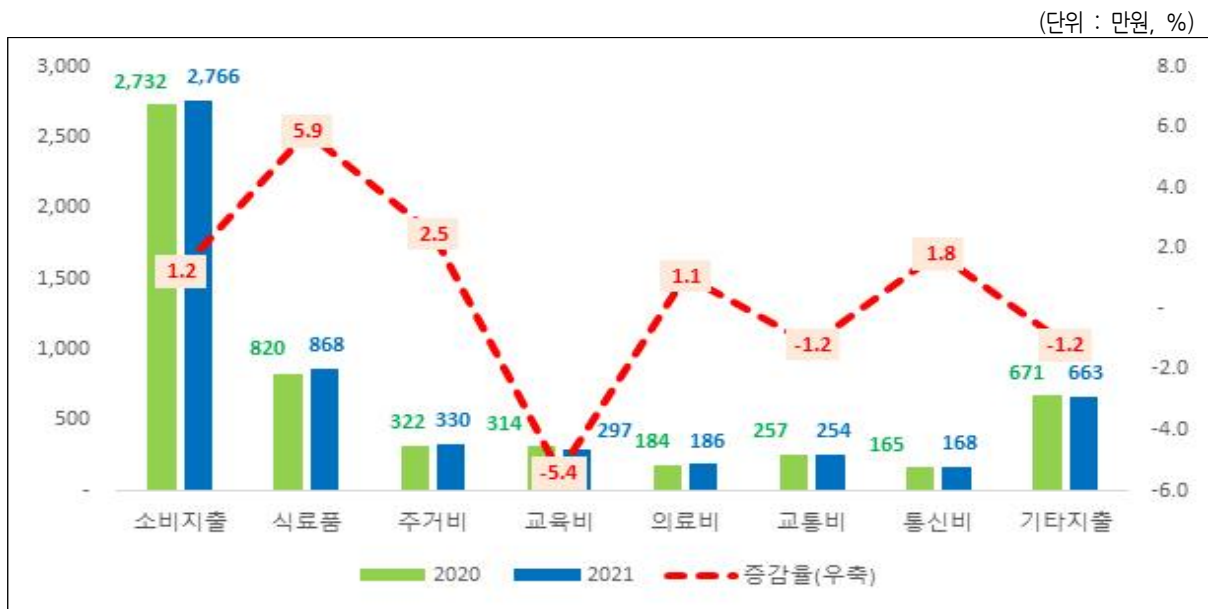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0년 소비지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24%, 소비지출 순증액은 34만원으로 소득증가 추세에 크게 못 미쳤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저소득·저자산 가구 집단의 소비지출은 크게 늘어났다.

비목별 소비지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전년대비 5.9%(820→868만원, 48만원↑) 증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수급이 줄고 유통비가 증가하는 등 가격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비는 전년대비 2.5%(322→330만원) 증가했고, 통신비와 의료비 또한 각 1.8%, 1.1% 증가했다. 교육비는 -5.4%(314→297만원)로 크게 줄었고, 교통비와 기타 지출 또한 -1.2% 줄었다.

[그림9] 코로나 1차연도 가구 비목별 소비지출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시계열을 확장하여 2012년 이후 2021년까지의 비목별 소비지출 변화를 보면, 의료비 지출이 40.9%(132→186만원, 54만원↑) 증가율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식료품비 또한 36.1%(638→868만원, 230만원↑)의 증가율로 소비지출 전체 평균 증가율 20.2%(2302→2766만원, 464만원↑)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교육비 지출은 2012년 가구 평균 349만원에서 2021년 297만원으로 -52만원이 줄면서 -14.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무상교육 확대와 더불어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기간 교통비도 -4.9%(267→254만원, 13만원↓) 감소했다.

[표4] 가구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지출
2012	2,302	638	292	349	132	267	161	463
2013	2,303	624	302	340	138	269	173	456
2014	2,306	633	303	335	148	268	175	445
2015	2,327	660	304	321	151	266	176	449
2016	2,340	673	306	313	152	257	174	466
2017	2,473	709	304	317	162	260	172	550
2018	2,601	757	318	317	167	265	170	607
2019	2,692	793	315	318	177	263	166	660
2020	2,732	820	322	314	184	257	165	671
2021	2,766	868	330	297	186	254	168	663
순증액	464	230	38	-52	54	-13	7	200
증가율	20.2	36.1	13.0	-14.9	40.9	-4.9	4.3	43.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1) 통계표 및 보고서
 주) 순증액과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21년 수치를 비교한 값임.

코로나 1차연도 가구 소비지출 변화의 가장 큰 특징 또한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소비지출증가율이 고소득·고자산 가구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소득 5분위 및 순자산 5분위별 2020년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1·2분위 가구 집단의 소비지출증가율이 4·5분위 가구 집단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소득 1분위 6.76%(1050→1121만원, 71만원↑), 2분위 5.10%(1825→1918만원, 93만원↑), 3분위 1.65%(2604→2647만원, 43만원↑), 4분위 0.41%(3384→3398만원, 14만원↑) 등의 순이었고, 5분위 가구는 -1.13%(4798→4744만원, -54↓)로 소비지출이 전년보다 줄었다.

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 증가율은 1분위 2.77%(1625→1670만원, 45만원↑), 2분위 2.46%(2112→2164만원, 52만원↑), 3분위 1.74%(2649→2695만원, 46만원↑), 5분위

0.56%(4091→4114만원, 23만원↑), 4분위 0.03%(3183→3184만원, 1만원↑)의 순이었다.

[그림10] 코로나 1차연도 소득·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액 변화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가구주 특성별 소비지출 변화에서 나타난 결과 또한 저소득·저자산 가구 집단에서 더 활발하게 소비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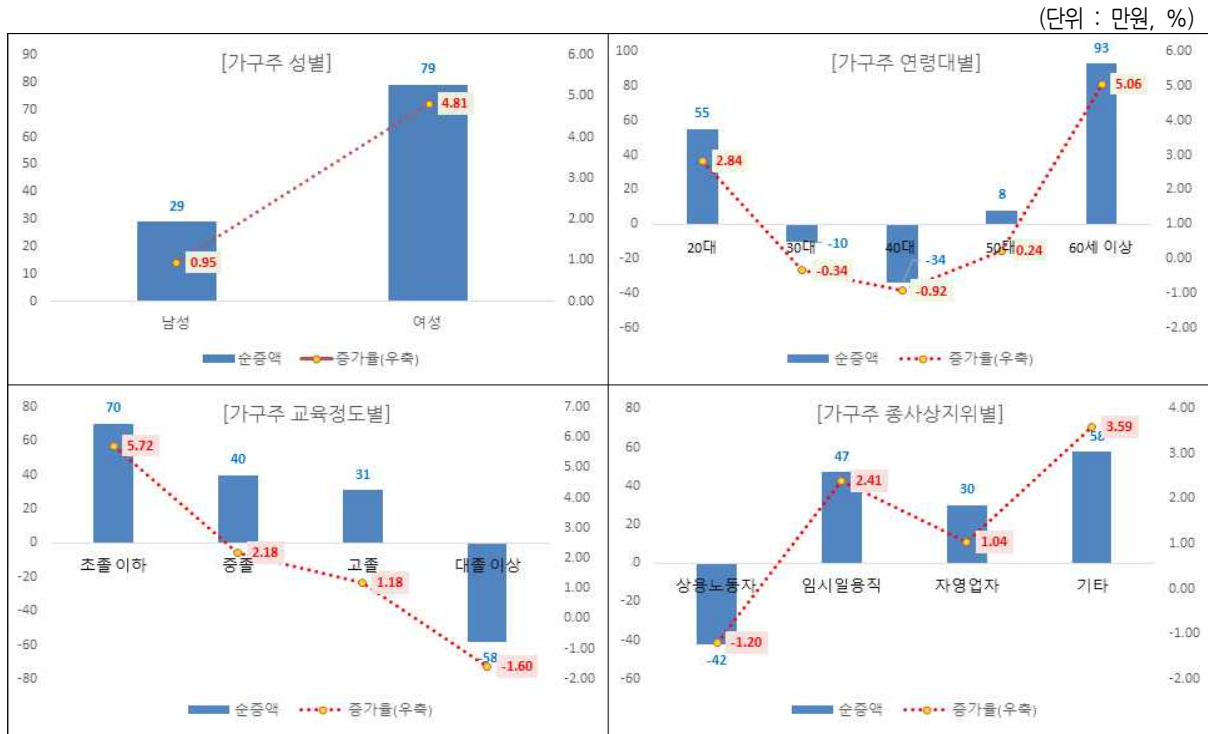
먼저 가구주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자산 가구인 여성 가구 소비지출증가율은 4.81%(1643→1722만원, 79만원↑)로 남성 가구 소비지출증가율 0.95%(3065→3094만원, 29만원↑)에 크게 앞섰다.

가구주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 가구 소비지출증가율이 5.06%((1838→1931만원, 93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 가구가 2.84%((1939→1994만원, 55만원↑), 50대 가구 0.24%(3332→3340만원, 8만원↑)의 순이었고, 30대 가구는 -0.34%((2919→2909만원, -10만원↓), 40대 가구는 -0.92%(3676→3642만원, -34만원↓)로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가구주 교육수준별로 보면, 초졸 이하 가구가 5.72%(1223→1293만원, 70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졸 2.18%(1834→1874만원, 40만원↑)와 고졸 1.18%(2636→2667만원, 31만원↑)의 순이었으며, 대졸이상 가구는 -1.60%(3631→3573만원, -58만원↓)나 감소했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무직 등 기타 가구의 소비지출증가율이 3.59%(1614→1672만원, 58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임시일용직 2.41%(1954→2001만원, 47만원↑)와 자영업자 1.04%(2897→2927만원, 30만원↑)의 순이었으며,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상용노동자 가구는 -1.20%(3509→3467만원, -42만원↓)로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그림11] 코로나 1차연도 가구주 특성별 소비지출 순증액 및 증가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 순증액 및 증가율은 2019년 소득 대비 2020년 소득을 비교한 값임.

아래 [그림11]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저축 소요 기간 추이'는 우리나라 평균소득 가구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모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산출해 본 것이다. 먼저 가구 저축가능액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했다. 소득 및 지출 항목 모두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값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체 가구 평균 저축가능액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KB주택가격 동향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각 년도 12월말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다.

2012년(조사년도)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4,233만원으로 비소비지출(757만원)과 소비지출(2,302만원)을 차감하면, 가구 평균 저축가능액은 1,174만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12년 12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0,780만원으로, 2012년 저축가능액 1,174만원으로 5억 78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43.3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2021년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6,125만원으로 비소비지출(1,122만원)과 소비지출(2,766만원)을 차감하면, 저축가능액은 2,237만원에 달한다. 2021년 12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4978만원으로 저축 소요 기간은 55.9년으로 2012년 대비 12.6년이 늘었다. 2012년과 비교하면 가구당 저축가능액 증가율도 90.5%(1,063만원)로 크게 늘었지만, 서울시 아파

트 가격 상승률은 146.1%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도 저축 소요기간은 5.9년이 늘어났는데, 불과 1년 만에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8%나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그림12]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저축 소요 기간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2012~2021), KB주택가격동향

주1)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소득 및 지출 관련 수치는 실제로는 조사 전년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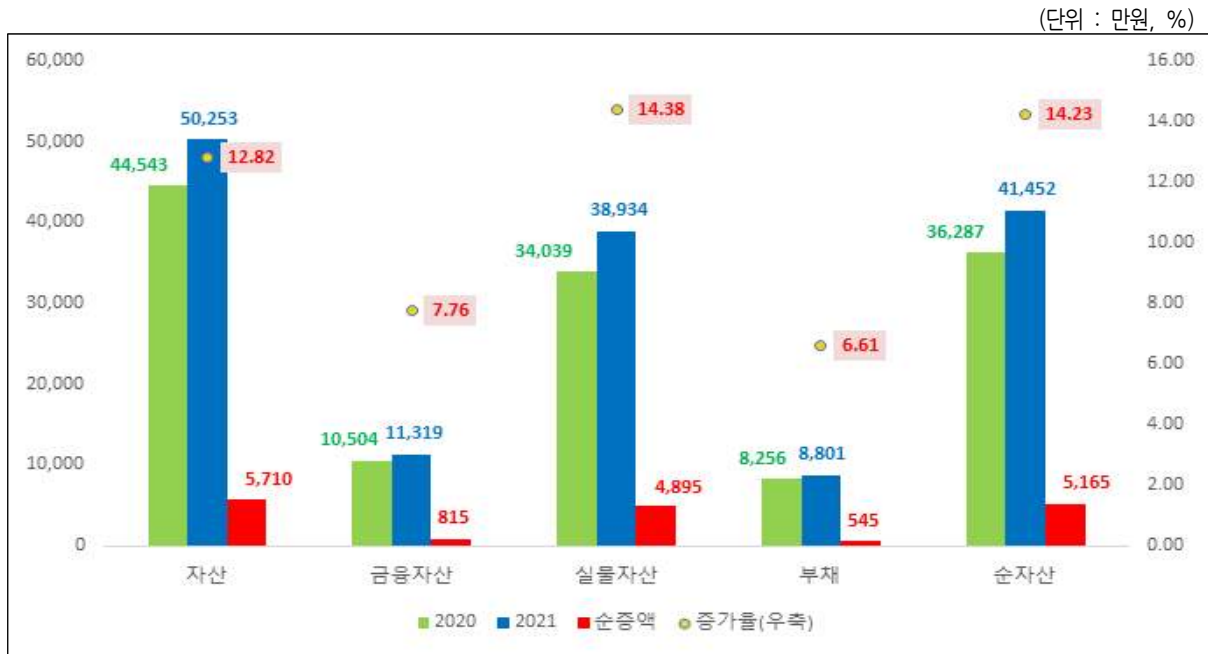
주2)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 년도 12월 기준임.

주3) 저축가능액은 경상소득에서 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액을 차감한 값이며, 저축 소요기간은 각 년도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각 년도 저축가능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임.

2) 가구 재무상태(자산&부채) 변화

2021년 3월 기준 가구 평균자산은 50,25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82%(5,710만원) 늘어났다. 동일기간 부채증가율은 6.61%(8,256→8,801만원, 545만원)였고, 가구 평균 순자산은 14.23%(36,287→41,452만원, 5,165만원↑)가 늘었다. 순자산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물자산(부동산) 증가율이 14.38%(34,039→38,934만원, 4,895만원↑)로 부채증가율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이었다.⁹⁾

[그림13] 코로나 1차연도 가구 재무상태(자산&부채)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및 통계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자산 및 부채액은 조사연도 3월 기준임.

자산 세부 내역별 변화를 보면, 금융자산증가율도 7.76%(10,504→11,319만원, 815만원↑)로 적지 않은 상승 폭을 보였지만, 실물자산증가율은 14.38%(34,039→38,934만원, 4,895만원↑)로 더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실물자산의 큰 폭 증가로 순자산증가율(14.23%, 36,287→41,452만원)과 순증액(5,165만원)도 크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020년 한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충격이 매우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자산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구 순

9)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의 경우 서울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을 보면 2020년 12월 10억 4299만원에서 2021년 12월 12억 4978만원으로 1년 동안 19.8% 상승했다.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시계열을 확장하여 2012년 이후의 가구 재무상태 변화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9년간 금융자산증가율은 39.04%(8,141→11,319만원, 3,178만원↑)에 머물렀지만, 실물자산증가율은 60.99%(24,184→38,934만원, 14,750만원↑)로 금융자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 3월 기준 전년대비 부채증가율은 6.61%로 자산증가율(12.82%)보다 크게 낮았지만, 2012년 이후 9년간 부채증가율을 보면 61.49%(5,450→8,801만원, 3,351만원↑)에 달하는 등 자산증가율(55.47%)보다 높았다. 동일기간 순자산증가율도 54.24%(26,875→41,452만원, 14,577만원)에 달했는데, 결국 가구 순자산 증가는 부채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보유 실물자산(부동산) 가치를 늘려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표5] 가구 재무상태(자산&부채) 추이

(단위 : 만원, %)

구 분	자산			부채			순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2012	32,324	8,141	24,184	5,450	3,684	1,766	26,875
2013	32,688	8,827	23,861	5,858	3,974	1,884	26,831
2014	33,539	9,013	24,526	6,051	4,118	1,933	27,488
2015	34,685	9,290	25,396	6,256	4,361	1,896	28,429
2016	36,637	9,638	26,999	6,719	4,721	1,998	29,918
2017	38,671	9,722	28,950	7,099	5,041	2,058	31,572
2018	42,036	10,346	31,689	7,668	5,539	2,129	34,368
2019	43,191	10,570	32,621	7,910	5,755	2,155	35,281
2020	44,543	10,504	34,039	8,256	6,050	2,207	36,287
2021	50,253	11,319	38,934	8,801	6,518	2,283	41,452
순증액	17,929	3,178	14,750	3,351	2,834	517	14,577
증가율	55.47	39.04	60.99	61.49	76.92	29.30	54.24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주1)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자산 및 부채액은 조사연도 3월 기준임.

주2) 순증액 및 증가율은 2012년과 2021년 데이터를 비교한 값임.

다음으로 자산 5분위별 코로나 시기 재무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일시적 소득증대 효과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1년 3월 기준 1분위 가구의 자산(순자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고자산 가구 집단과 저자산 가구 집단 간 자산(순

자산) 격차가 더 커지면서 자산 불평등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 1분위 가구의 2021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금융자산증가율은 12.0%(207만원 ↑)로 전체 가구 평균(7.8%)은 물론 4분위(5.1%), 5분위(5.2%) 가구 증가율보다 높았다. 더불어 부채증가율이 -2.1%로 감소하면서, 순자산증가율이 23.2%(309만원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순자산 순증액(309만원)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물자산 순증액(80만원)이나 부채 순증액(-21만원) 보다는 금융자산 순증액(207만원)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6.11%(146만원 ↑)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순자산증가율은 재난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 분석되며, 자산 5분위 가구 집단 간 자간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20년 10억 8804만원에서 2021년 12억 4586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표6] 코로나 1차연도 자산 5분위별 재무상태 변화

(단위 : 만원, %)

구 분	전 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산	2020	44,543	2,309	12,183	26,074	47,396	134,734
	2021	50,253	2,597	13,487	28,938	54,547	151,688
	순증액	5,710	288	1,304	2,864	7,151	16,954
	증가율	12.8	12.5	10.7	11.0	15.1	12.6
금융자산	2020	10,504	1,722	5,602	8,226	11,625	25,342
	2021	11,319	1,929	6,286	9,506	12,218	26,655
	순증액	815	207	684	1,280	593	1,313
	증가율	7.8	12.0	12.2	15.6	5.1	5.2
실물자산	2020	34,039	587	6,581	17,847	35,770	109,392
	2021	38,934	667	7,201	19,431	42,330	125,032
	순증액	4,895	80	620	1,584	6,560	15,640
	증가율	14.4	13.6	9.4	8.9	18.3	14.3
부채	2020	8,256	979	2,390	5,079	8,229	24,601
	2021	8,801	958	2,748	5,486	9,351	25,462
	순증액	545	-21	358	407	1,122	861
	증가율	6.6	-2.1	15.0	8.0	13.6	3.5
순자산	2020	36,287	1,330	9,793	20,994	39,166	110,134
	2021	41,452	1,639	10,739	23,452	45,196	126,225
	순증액	5,165	309	946	2,458	6,030	16,091
	증가율	14.2	23.2	9.7	11.7	15.4	14.6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및 통계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자산 및 부채액은 조사연도 3월 기준임.

자산 불평등 추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산 5분위별 2021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자산 순증액을 산출하였다. 전체 가구 평균 순증액은 5,710만원(44,543→50,253만원)에 이르렀으며, 5분위 가구는 단 1년 만에 1억 6,954만원(134,734→151,688만원)이 늘어났다. 4분위 가구 자산 순증액도 7,151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5분위 가구 순증액의 42.2% 수준에 머물렀다. 1분위 가구 순증액은 288만원(2,309→2,597만원)에 불과했다.

자산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5·4분위 가구는 실물자산증가율이 높았고, 저자산 가구인 1·2분위 가구는 금융자산증가율이 더 높았다. 금융자산의 경우 1분위(12.0%)와 2분위(12.2%)의 증가율이 4분위(5.1%)와 5분위(5.2%)보다 매우 높았고, 실물자산증가율은 4분위(18.3%)와 5분위(14.3%) 가구 증가율이 1분위(13.6%)와 2분위(9.4%) 가구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 또한 보편지급 방식으로 제공된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4] 코로나 1차연도 자산 5분위별 자산항목별 순증액 및 금융자산 비중 변화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및 통계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자산 및 부채액은 조사연도 3월 기준임.

한편 자산 1·2분위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간 순증액 편차가 1분위(금융 207만원 > 실물 80만원)·2분위(금융 684만원 > 실물 620만원) 등으로 크지 않았지만, 4·5분위 가구의 경우는 4분위(금융 593만원 < 실물 6,560만원)·5분위(금융 1,313만원 < 실물 15,640만원) 등으로 실물자산 순증액이 금융자산 순증액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로나 시기 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별 비중 변화를 통해서도 분위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된 이유를 알 수 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8%에 달할 정도로 금융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2분위 가구 또한 금융자산 비중이 46.61%로 3분위(32.85%) · 4분위(22.40%) · 5분위(17.57%) 가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실물 자산 비중이 낮다는 것으로, 보유 실물자산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적게 받게 된다. 자산 4 · 5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애초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2021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더 높아졌다.

부채의 경우 1분위 가구는 전년동월대비 -2.1% 줄었으며, 5분위 가구는 3.5%의 증가율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가구 평균증가율은 6.6%로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그간의 급증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순자산 순증액 또한 자산 순증액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는데, 5분위(16,061만원), 4분위(6,030만원), 3분위(2,458만원), 2분위(946만원), 1분위(309만원) 가구의 순이었으며, 전체 가구 평균 순증액은 5,165만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한 덕분에 순자산증가율은 23.2%에 달했지만, 순증액은 불과 309만원으로 5분위 가구 순증액 16,091만원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그림15] 코로나 1차연도 자산 5분위별 자산 및 순자산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및 통계표

주)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자산 및 부채액은 조사연도 3월 기준임.

다음은 가구주 특성별로 순자산 변화를 살펴보았다. 2021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순증액은 5,165만원이었다.

가구주 성별 순자산 순증액은 남성(5,763만원) 가구가 여성(3,723만원) 가구 보다 2,040만원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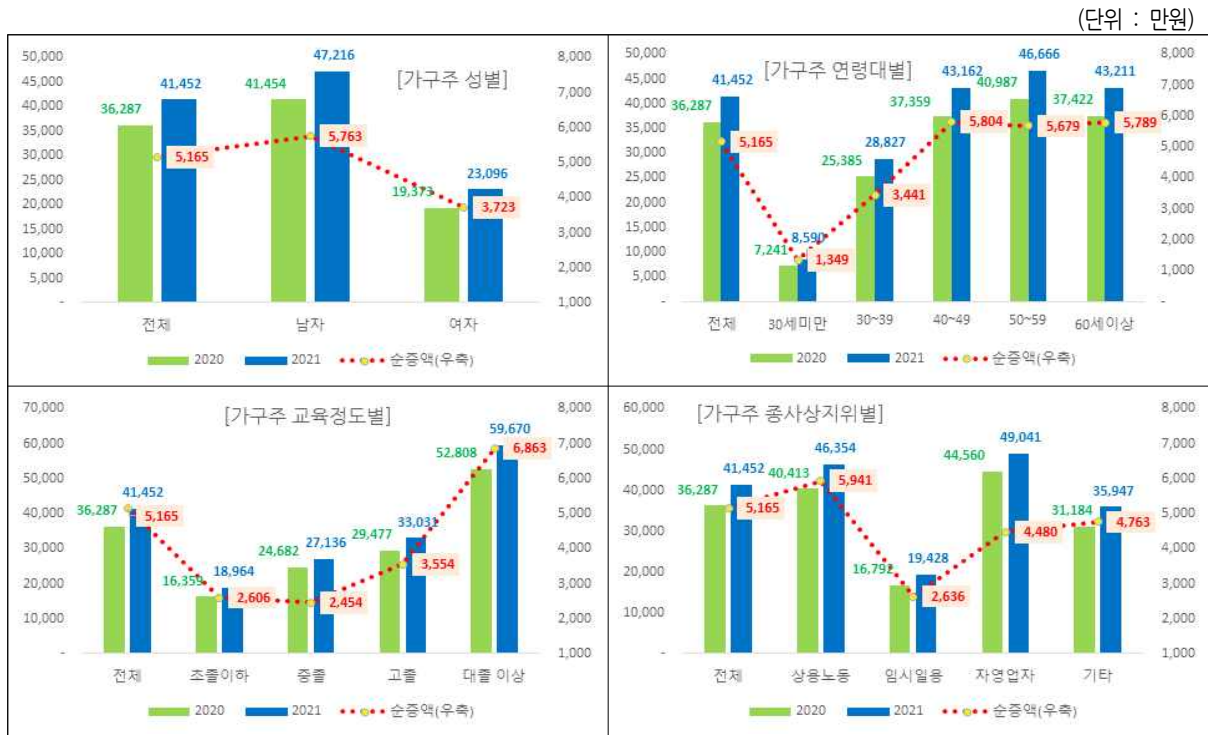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순증액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자산 가구 집단인 40대(5,804만원) ·

60대(5,789만원) · 50대(5,679만원) 가구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더 많이 늘었으며, 30대 가구 순증액은 3,441만원에 그쳤고, 20대 가구 순증액은 불과 1,349만원으로 40대 가구 순증액의 23.2% 수준에 불과했다.

가구주 교육정도별 순자산 순증액은 대졸 가구가 6,863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고졸(3,554만원), 초졸(2,606만원), 중졸(2,454만원)의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 순증액을 보면, 상용노동자 가구가 5,941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임시일용직 가구 순증액은 2,636만원으로 상용노동자 가구 순증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림16] 코로나 시기 가구주 특성별 순자산 변화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 및 보고서

주1)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하며, 자산 및 부채액은 조사연도 3월 기준임.

주2) 순증액은 2021년 순자산에서 2020년 순자산을 차감한 값임.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는 저소득 · 저자산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을 높여 일시적으로나마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지만, 자산 격차 축소 즉 자산 불평등 해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보유자산이 많은 고소득 · 고자산 가구 집단의 자산(순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3. 나가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구소득은 전년대비 3.39%(201만원↑) 증가했다.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가구 평균 145만원 늘었다. 공적 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정책의 영향이었다.

그런데 공적 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가구들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 5분위별 소득증가율은 1분위(12.03%), 2분위(6.77%), 3분위(3.70%), 4분위(2.79%), 5분위(2.19%) 등으로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소득증가율은 더 높았다.

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도 1분위(6.11%)와 2분위(6.52%)의 소득증가율이 4분위(0.78%)와 5분위(2.24%)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또한 1분위(4.06%)와 2분위(5.96%)의 증가율이 4분위(1.55%)와 5분위(3.20%)보다 높았다.

가구주 특성별로 소득증가율 또한 여성 가구·60대 이상 가구·초졸 이하 가구·기타 및 임시일용직 가구 등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 증가율은 3.39%로, 여성(8.52%), 60대 이상(7.77%), 초졸 이하(6.85%), 중졸(4.11%), 기타(5.85%), 임시일용직(3.77%) 가구등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 집단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가구 평균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0년 소비지출증가율은 1.24%(34만원↑)로 소득증가에 크게 못 미쳤지만,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증가율을 보면, 1분위 6.76%(71만원↑), 2분위 5.10%(93만원↑), 3분위 1.65%(43만원↑), 4분위 0.41%(14만원↑) 등의 순이었고, 5분위 가구는 -1.13%(-54만원↓)로 전년보다 줄었다.

순자산 5분위별 소비지출증가율은 1분위 2.77%(45만원↑), 2분위 2.46%(52만원↑), 3분위 1.74%(46만원↑), 5분위 0.56%(23만원↑), 4분위 0.03%(1만원↑)의 순이었다.

가구주 특성별 소비지출증가율 또한 여성 4.81%(79만원↑), 60대 이상 5.06%(93만원↑), 20대 2.84%(55만원↑), 초졸 이하 5.72%(70만원↑), 중졸 2.18%(40만원↑), 기타 3.59%(58만원↑), 임시일용직 2.41%(47만원↑) 등으로 저소득·저자산 가구 집단에서 소비지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

2020년 가구 저축가능액은 7.22%(151만원↑) 늘어났지만, 2021년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9.8%(104,299→124,978만원) 상승한 결과, 가구 평균 저축가능액으로 해당 금액을 모으는데 필요한 시간이 2020년 50.0년에서 2021년 55.9년으로 5.9년이 늘어났다.

2021년 3월 기준 가구 평균자산은 50,25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82%(5,710만원) 늘어났다. 동일기간 부채증가율은 6.61%(545만원)였고, 가구 순자산은 14.23%(5,165만원↑)가 늘었다. 순자산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물자산(부동산) 증가율이 14.38%(34,039→38,934만원, 4,895만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1차연도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소득 격차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자산 격차 확대 추세는 여전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실물자산(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1차연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제적 충격 발생 시 가구(원)를 대상으로 직접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또한 소득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내수 활성화, 즉 소비 진작에 있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넷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다.